

임팩트 커넥터

변화를 잇는 사람들

목차

This Week Point	3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4
평가자를 평가하는 해 — ESG 점수가 투자 판단 정보원 1위에서 7위로 내려가고, 에코바디스는 기준연도 없는 목표를 지웠다	4
'임팩트'라는 말에 근거를 묻다 — 유럽 감독기구의 임팩트·전환 주장 지침, 9월 27일 시행된 그린워싱 지침, 그리고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프랑스의 성적표	6
보고서는 얇아지고 데이터는 단단해진다 — 유럽 은행 ESG 공시 37% 축소, 통합보고서를 접는 일본 대기업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11월 10일	8
안보가 자본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 신규 사업의 90%가 광업이 된 미국 개발금융공사, '네 가지 힘'을 꺼낸 JP모건, 국방비에 밀린 영국의 히트펌프	10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13
나머지 95%를 움직이는 재단들 — 기금 3억 8,000만 달러를 사명에 맞추는 닛지재단, 93%까지 온 우드콕재단, 그리고 상장 전에 돈을 돌려받은 아프리카 대출 플랫폼 투자자들	13
보험이 물러난 자리는 누가 메우나 — 유럽 보험사 내부자 24명의 경고, 보험으로 보상된 재해 손실 25%, 그리고 폭염이라는 가장 큰 부채	15
공급망 끝까지 책임이 내려간다 — 애플이 끊은 시설 257곳, 생활임금을 주는 의류 브랜드 110곳 중 4곳, 그리고 헌 옷이 도착하는 나라를 위한 연합	17
일하는 사람은 늘고 조직은 그대로인 이탈리아의 제3섹터 — 비영리 37만 곳·고용 93만 8,000명, 8억 유로가 아닌 80억 유로를 요구한 포럼, 그리고 '두 숫자 시험'	19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21
광명 포럼이 남긴 숫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213곳에서 300곳으로, 수익계약 60%, 그리고 "협동조합 금융 1,000조 원이 지역에 돌아오지 않는다"	21
설치 대수가 아니라 작동 여부를 묻는다 — 보조금 1조 6,695억 원 중 멈춘 충전기 6,670기, 3배 늘어난 탄소중립포인트의 '참여처 1곳'	23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25

05	이번 호 전망	26
06	지난 전망 점검	27
07	편집장의 글	27
	① 점수를 믿지 않는 시대의 신뢰	27
	② 안보의 언어와 돌봄의 언어	27
	③ 재단과 지방정부, 남은 두 개의 장부	28

THIS WEEK POINT

임팩트를 판정하는 쪽이 판정을 받기 시작했다. 컨설팅사 ERM이 운용자산 23조 5,000억 달러 규모 투자기관 전문가 53명에게 물었더니, ESG 평가에 대한 신뢰는 5점 만점에 3.31에서 3.05로 내려갔고 투자 결정에 쓰는 정보원 순위에서 ESG 평가는 2023년 1위에서 7위로 밀렸다. 같은 주 평가기관 에코바디스는 기준연도가 없는 감축 목표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고, 유럽 금융시장 감독기구는 펀드와 채권의 '긍정적 임팩트' 주장에 의도성과 추가성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보고서는 얇아지고, 한 줄 한 줄의 책임은 무거워졌다. 유럽은행감독청은 대형 은행의 ESG 공시 항목을 37% 줄이는 전산 규격을 확정했고, 일본에서는 소니그룹과 미쓰비시케미컬그룹에 이어 기린홀딩스가 통합보고서 폐지를 검토한다. 그런데 같은 시기 유럽의 그린워싱 규제는 9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캘리포니아는 11월 10일을 기업 온실가스 보고 첫 마감일로 못 박았다.

돈의 우선순위를 다시 쓰는 손이 셋 있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2026회계연도 신규 사업 90%가 광업·채굴이었고, JP모건은 금융배출량을 "불완전한 지표"라고 부르며 녹색금융의 범위에 원자력과 전력망을 넣었다.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지역 재단들이 기금 전체를 사명에 맞추겠다고 나섰고, 유럽 보험사 내부자 24명은 기후재난 보장이 이미 물러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심층 — 이번 호를 관통하는 한 문장: 임팩트의 신용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검증 경로'에서 나온다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주 꼭지들은 서로 다른 무대에서 같은 장치를 손보고 있다. 평가기관은 기준연도 없는 목표를 지우고, 감독기구는 임팩트 주장에 근거를 요구하고, 은행 감독기구는 공시 칸을 줄이되 전산으로 대조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공통점은 '무엇을 말했는가'에서 '그 말을 누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로 무게가 옮겨 갔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ESG 점수 대신 자체 조사와 기업 직접 대화를 1·2위 정보원으로 꼽은 것도 같은 흐름이다. 남이 매긴 점수를 받아 쓰는 대신, 검증 경로를 직접 확보하려 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숫자의 출처를 보여 줄 수 있는 조직이다.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목표값을 갖춘 기업, 공시 정보를 전산 규격으로 내는 은행, 기금의 93%를 사명에 맞추는 뒤 그 비율을 공개하는 재단이 그렇다. 불리해지는

쪽은 선언과 표어로 신뢰를 쌓아 온 조직이다. 근거 없이 '임팩트'를 붙인 펀드, 감축 실적 대신 목표만 제시해 온 협력사, 위험을 1년 단위 계약으로만 다루며 장기 손실을 낮춰 잡아 온 보험사가 같은 압력을 받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금융위원회 로드맵상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의 기후 공시가 의무가 된다. 그 전까지 국내 기업과 임팩트 조직이 준비할 것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숫자 하나하나의 확인 경로다. 감축 목표마다 기준연도를 붙이고, 사회적 성과 지표마다 산정 방식과 원자료 위치를 적어 두는 일은 지금 허락 없이 시작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검증 경로를 강조하다 보면 측정하기 쉬운 것만 남고 중요한 것이 빠질 수 있다. 에코바디스가 산업별로 무관한 문항을 걷어 낸 것은 부담을 줄이지만, 그만큼 비교 범위도 좁힌다. 공시 항목이 줄어든 자리에 무엇이 사라졌는지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01 헤드라인 — 이번 주 핵심 흐름

평가자를 평가하는 해 — ESG 점수가 투자 판단 정보원 1위에서 7위로 내려가고, 에코바디스는 기준연도 없는 목표를 지웠다

임팩트와 ESG의 세계에서 평가기관은 오랫동안 심판 역할을 했다. 기업이 내놓은 자료를 읽고 점수를 매기면, 투자자와 구매 담당자가 그 점수로 판단했다. 이번 주 그 심판석에 대한 성적표가 나왔다. 지속가능성 컨설팅사 ERM은 북미·유럽·아시아태평양·중남미의 투자기관 전문가 53명을 조사한 '평가기관을 평가하다 2026' 보고서를 냈다. 이들이 속한 기관의 운용자산은 약 23조 5,000억 달러다. ESG 평가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한다고 믿는 정도는 5점 만점에 3.05로, 2023년 조사의 3.31보다 낮아졌다.

투자 결정에 쓸모 있는 정보원 순위에서 기업 ESG 평가는 2023년 1위에서 7위로 내려갔고, 그 자리를 자체 조사와 기업과의 직접 대화가 차지했다. 매주 한 번 이상 평가를 쓴다는 응답도 69%에서 58%로 줄었다. 다만 평가를 버린 것은 아니다. 응답자의 51%는 여전히 평가가 투자 성과에 중요한 정보를 준다고 했고, 62%는 의무 공시가 늘어나면 오히려 평가 데이터를 더 쓰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평가기관별로는 MSCI가 품질 인식에서 2023년 7위에서 1위로 올라섰고 CDP, 에코바디스, S&P글로벌이 뒤를 이었다.

같은 주 평가기관 쪽에서도 기준을 조였다. 에코바디스는 14일 2026년 3분기 평가방법론 개정을 발표했다. 탄소 감축이나 산업재해 감소 같은 정량 목표를 낼 때 기준연도와 목표연도, 목표값을 모두 제시해야 하고, 증빙에 기준연도가 없으면 그 목표는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 제품 회수율, 생물다양성 민감 지역 인근 사업장 수, 단체협약 적용 직원 비중, 아동노동·강제노동 사건 수 같은 정량 지표가 국제 공시기준에 맞춰 추가됐다.

중국 정부가 8월 5일 책임있는비즈니스연합(RBA)을 제재 명단에 올리자, 에코바디스는 그 이후 중국 본토 기업이 낸 RBA·책임있는광물조달이니셔티브 회원 자격을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리아에서는 평가기관이 국가 단위 지도를 내놓았다. 서베드 ESG 레이팅스는 이탈리아 기업의 62.5%가 전환 위험이 낮고 16.9%가 높거나 매우 높은 구간에 있으며, 고위험 기업의 매출이 약 7,450억 유로라고 분석했다. 스탠더드앤티크스는 유럽 주요 유틸리티 30곳 중 80%가 '지속가능 등급'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6개국 7개 매체가 「ESG 평가·EcoVadis」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4건이다.

한국 시사점 — 국내에서 ESG 평가는 이미 거래 조건이다.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국내외 협력사 2,086곳에 ESG 서면진단을 하고 127곳을 현장 실사했으며, 평가 대상을 2차 협력사까지 넓히고 결과를 입찰 절차에 연결했다. 이런 구조에서 에코바디스의 기준연도 의무화는 국내 중소 협력사에 바로 닿는다. 많은 협력사가 '2030년까지 몇 퍼센트 감축'이라는 문장만 적어 왔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이 평가 점수 대신 직접 대화와 자체 조사를 앞세운다는 조사 결과도 국내 원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점수를 받아 오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협력사가 낸 숫자의 산정 근거를 함께 들여다보는 구매 담당 조직이 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된다.



심층 — 점수의 권위가 줄어든 자리에 무엇이 들어서는가 (ERM 투자자 조사 · 에코바디스 방법론 개정 · 서베드 · 스탠더드앤티크스)

왜 지금 중요한가. 조사 결과는 모순처럼 보인다. 신뢰는 떨어졌는데 평가가 믿을 만한 정보원이라는 응답은 37%에서 44%로 올랐고, 의무 공시가 오면 더 쓰겠다는 응답이 다수다. 풀어 보면 평가의 역할이 바뀐 것이다. 투자자는 평가를 최종 판정으로 쓰지 않고, 자체 분석과 기업 대화의 출발점으로 쓴다. 조사에서도 평가 데이터의 1순위 용도가 자체 조사의 기초 자료였고 2순위가 기업과의 대화 준비였다. 점수의 권위가 줄어든 자리에 들어서는 것은 원자료와 방법론이다. 그래서 평가기관들이 방법론을 공개하고 근거 요건을 조이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방법론이 투명하고 원자료를 제공하는 평가기관이다. MSCI가 품질 인식 7위에서 1위로 오른 것, 유일하게 품질 점수가 오른 기관이라는 점은 시장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보여 준다. 기업 쪽에서는 목표와 실적을 같은 기준선 위에 놓을 수 있는 곳이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설문 응답 기술로 점수를 관리해 온 기업, 그리고 평가 결과만 사서 쓰고 내부 분석 역량을 키우지 않은 투자기관이다. 중국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별도의 부담을 진다. 정치적 제재 때문에 기존 감사 증빙이 효력을 잃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2월 확정한 기후 공시 기준은 목표마다 기준 시점과 측정 방식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국제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에코바디스 개정은 즉시 적용되므로, 다음 평가 주기를 앞둔 국내 협력사는 지금 제출 자료의 정량 목표마다 기준연도를 채워 넣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중국 본토 공장을 둔 국내 기업은 RBA 회원 자격을 대체할 제3자 감사 증빙을 따로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원청 구매 조직은 평가 등급과 함께 협력사의 원자료 표 한 장을 받는 관행을 만들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평가 신뢰도 하락을 평가 무용론으로 읽으면 안 된다. 조사 표본은 53 명이고, 응답자의 다수는 여전히 매주 평가를 쓴다. 또 '산업별 중대 이슈만 묻는다'는 개정은 부담을 덜지만, 업종 간 비교를 어렵게 만든다. 평가가 좁아질수록 기업은 평가 밖의 영향을 스스로 기록해 뒤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In-House Research, Engagement Overtake ESG Ratings as Investors' Top Sustainability Tools: Survey · IMPACT ON (한국, 2026-10) — 에코바디스, ESG 평가기준 개편...정량목표 기준연도 의무화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Cerved ESG Ratings: basso rischio di transizione per oltre il 60% delle imprese italiane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Rating ESG, Terna è tra le utility europee più sostenibili per Standard Ethics

'임팩트'라는 말에 근거를 묻다 — 유럽 감독기구의 임팩트·전환 주장 지침, 9월 27일 시행된 그린워싱 지침, 그리고 감사를 통과하지 못할 프랑스의 성적표

유럽증권시장감독청은 이번 주 펀드와 채권의 지속가능성 주장에 관한 세 번째 주제별 지침을 냈다. 이번 초점은 '긍정적 임팩트'와 '기후 전환'이라는 두 가지 주장이다. 새 의무를 만들지는 않지만, 감독기구가 무엇을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으로 볼지를 미리 밝힌 문서다. 감독청이 현장에서 관찰한 문제는 세 가지였다. 투자자가 만든 임팩트와 투자 대상 기업이 만든 임팩트를 섞어 쓰는 경우, 투자 전략이 어떻게 임팩트에 기여하는지 설명 없이 주장만 하는 경우, 그리고 근거가 부족한 경우다.

감독청은 의도성, 곧 처음부터 임팩트를 목표로 삼았는지와, 추가성, 곧 그 투자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변화인지를 따져 설명하라고 권했다. 결과는 산출·성과·임팩트 가운데 어느 층위를 재는 지표인지 밝혀 측정하라고 했다. 기후 전환 주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 불확실성이 크므로, 목표와 지표, 이행 계획, 지금까지의 진척을 함께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 감독청의 입장이다.

기업 쪽 규칙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유럽연합의 소비자 대상 그린워싱 방지 지침이 9월 27일부터 적용되면서 근거 없는 환경 표현이 규제 대상이 됐다. 프랑스의 분석 스타트업 2050애널리틱스는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 열 곳 중 일곱 곳가량이 기업 홍보 문구를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탈리아에서는 감독청이 2026년도 상장사 결산 점검의 공통 우선순위를 발표했는데, 기후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힌 기업은 그 평가가 재무 정보에도 드러나야 하고, 배출 감축 목표를 제시한 기업은 어떤 조치와 자원으로 달성할지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잣대를 국가에 들이댄 글도 나왔다. 프랑스 감사원이 7일 낸 생태 전환 보고서를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서처럼 읽어 보면 감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자체 생태 전환 계획에서 세운 54개 목표 중 달성한 것은 11개였고, 기후 공공투자는 연 1.3% 늘고 있지만 필요한 증가는 17.6%였다. 2030년 필요 재원을 계산해 놓고 조달 방안은 밝히지 않아, 전문가 눈에는 '재원 없는 전환 계획'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13개국 28개 매체가 「그린워싱」 이야기를 다뤘고, 전체 기사량을 감안해도 직전 4주보다 약 2.8배 늘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4건이다.

한국 시사점 — 국내 임팩트 펀드와 지속가능 채권도 같은 질문을 피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7월 내놓은 로드맵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2027 사업연도 기후 정보를 공시하고, 2029년에는 자산 5조 원 이상으로 넓히는 일정을 담았다. 공시가 의무가 되면 홍보 문구와 공시 숫자의 불일치가 곧바로 드러난다. 유럽 감독청이 지적한 '투자자 임팩트와 기업 임팩트의 혼동'은 국내 임팩트 펀드 소개 자료에서도 흔하다. 투자한 기업이 만든 일자리 수를 펀드의 성과처럼 적는 방식이다. 펀드가 그 기업의 성장에 실제로 무엇을 더했는지, 곧 추가성을 따로 설명하는 습관이 지금부터 필요하다.



심층 — 주장 단위의 책임이 생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주제별 지침 · 그린워싱 방지 지침 · 결산 점검 우선순위 · 프랑스 감사원)

왜 지금 중요한가. 지금까지 그린워싱 논쟁은 상품 전체가 '녹색'이냐 아니냐의 분류 문제였다. 이번 주 문서들은 분류가 아니라 문장 하나하나를 본다. '임팩트를 만든다', '전환 중이다'라는 문장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물을 수 있게 됐다. 감독청이 제시한 정확성·접근성·입증·최신성 네 원칙은 문장 단위로 적용된다. 규제가 상품 라벨에서 주장

문장으로 내려온 것이다. 프랑스 감사원 보고서를 기업 보고서처럼 읽은 글은 이 잣대가 공공 부문으로도 번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임팩트 측정을 원래 해 온 전문 운용사다. 의도성과 추가성, 성과 지표를 갖춘 펀드는 이제 그것을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다. 불리해지는 쪽은 'ESG 통합'과 '임팩트'를 같은 말처럼 써 온 대형 운용사의 마케팅 조직, 그리고 미래 목표만 있고 이행 계획이 없는 기업이다. 이탈리아 결산 점검 우선순위처럼 감축 목표에 '어떤 자원으로'를 묻기 시작하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목표는 공시에서 약점이 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금융위원회 로드맵은 2028년 의무 공시를 시작하면서 Scope 3 공시에는 대상별로 3년 유예를 줬다. 유예 기간은 숫자를 늦게 내도 된다는 뜻이지 홍보 문구를 그대로 뒤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국내 운용사와 발행 기업은 지금 쓰는 지속가능성 문구를 목록으로 뽑아, 문장마다 근거 자료와 측정 총위(산출인지 성과인지 임팩트인지)를 붙여 보는 점검을 할 수 있다. 근거를 붙이지 못하는 문장은 고치거나 지우는 것이 가장 싼 대응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문장 단위 규제는 기업을 침묵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에서 보고서는 계속 내되 알리지는 않는 흐름이 이미 나타났다. 말을 줄이는 것과 근거를 갖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또 2050에너지리틱스의 '열 곳 중 일곱 곳'은 한 분석사의 추정이고 원문 전문은 유료라 산출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 수치보다 방향으로 읽어야 한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ESMA Guides Investment Firms on Avoiding Greenwashing in Impact, Climate Transition Claims](#) · Novethic (프랑스, 2026-10) — [Directive anti-greenwashing : 7 entreprises sur 10 devront revoir les mots de la RSE](#) · Novethic (프랑스, 2026-10) — [Le rapport de durabilité de la France ne passerait pas l'audit](#)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Rendicontazione 2026, tre priorità ESMA per imprese quotate e investitori](#)

보고서는 얇아지고 데이터는 단단해진다 — 유럽 은행 ESG 공시 37% 축소, 통합보고서를 접는 일본 대기업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11월 10일

유럽은행감독청은 12일 은행의 ESG 위험 공시에 쓰일 전산 규격, 곧 데이터 항목 사전과 전자보고 표준 택소노미를 확정했다. 6월에 내놓은 공시 개정안을 실제 은행 전산에 엮기 위한 기술 자료다. 개정안의 골자는 두 가지다. 대형 은행 중심이던 ESG 위험 공시를 모든 은행으로 넓히되, 규모에 따라 항목을 달리했다. 대형 은행의 ESG 공시 데이터 항목은 37%, 중형 은행은 17% 줄고, 소규모 은행에는 대형 은행보다 84% 적은 항목만 요구한다. 소규모 은행의 공시 자료는 감독당국이 이미 받은 보고 데이터로 미리 채워 중앙 플랫폼에 올린다. 은행이 건전성 공시에 낸 정보는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보고서에서 그대로 참조할 수 있게 했다. 첫 공시 기준일은 올해 12월 말이고 소규모 은행은 2027년 12월 말이다.

일본에서는 다른 방향의 정리가 진행 중이다. 소니그룹과 미쓰비시케미컬그룹이 통합보고서 발행을 그만두고 웹사이트 중심으로 정보를 수시 갱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기린홀딩스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지속가능경영 매체 취재로 알려졌다. 기린은 2014년도부터 통합보고서를 냈지만, 2025년도에 일본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기준을 3년 앞당겨 적용해 유가증권보고서 안에서 지속가능성 재무 정보를 공시했고 제3자 보증도 받았다. 같은 내용을 두 문서에 나눠 낼 이유가 줄어든 것이다.

일본에서 2025년 통합보고서를 낸 기업은 1,214곳으로 전년보다 64곳 늘었는데, 이제 정점을 지날 수도 있다. 한 대기업 전직 환경 담당 임원은 "모두 공시 대응에 지쳤다"며, 보고서를 내면 "그래서 주가가 올랐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행정법국이 기업 온실가스 보고 규정을 최종 승인해 첫 보고 마감일 11월 10일로 확정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이 대상이고, 대기자원위원회는 해당 가능성이 있는 4,000곳 넘는 기업 명단을 냈다. 첫해에는 이미 모은 전년도 데이터를 쓰고 제한적 보증 없이도 받아 주는 완화 조치가 붙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일본의 2개 매체가 「통합보고서」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국내 금융권도 서술형 공시를 데이터로 바꾸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개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 28곳에 재무제표 주석의 전자 데이터 제출을 도입했고, 올해 8월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금융업 상장사로 넓혔다. 다만 지속가능성 공시를 전자 데이터로 내게 하는 구체적인 규격과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유럽이 공시 항목을 줄이면서도 전산 규격부터 확정한 순서는 참고할 만하다.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해마다 두꺼워지는 동안 비교 가능한 데이터는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항목을 늘리기보다 같은 항목을 같은 형식으로 내는 것이 먼저다.



심층 — 공시 다이어트의 진짜 의미는 '형식의 통일'이다 (유럽은행감독청 전산 규격 · 기린·소니·미쓰비시케미컬 ·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왜 지금 중요한가. 공시 항목이 줄었다는 소식은 규제 후퇴로 읽히기 쉽다. 하지만 세 사례를 겹치면 다른 그림이 나온다. 유럽은 항목을 줄였지만 적용 대상은 모든 은행으로 넓혔고, 전산으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일본 기업은 통합보고서를 접었지만 그 내용을 법정 공시 문서로 옮기고 보증을 받았다. 캘리포니아는 첫해 요건을 완화했지만 마감일은 고정했다. 셋 다 '말을 담는 그릇'은 줄이고 '대조 가능한 숫자'는 지키는 쪽으로 움직였다. 자발적 보고서의 시대가 법정 공시의 시대로 넘어가는 장면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지속가능성 데이터를 재무 데이터와 같은 시스템에서 관리해 온 기업이다. 기린처럼 기준을 앞당겨 적용하고 보증까지 받은 기업은 보고서 하나를 줄이면서 비용도 줄인다. 소규모 은행도 감독 데이터로 자동 작성되는 공시 덕에 부담이 준다. 불리해지는 쪽은 보고서 제작과 수상 경쟁에 의존해 온 시장이다. 통합보고서 디자인과 편집을 대행해 온 업체, 보고서 순위를 매겨 온 평가 사업은 일감이 줄어든다. 데이터 체계 없이 서술로 공백을 메워 온 기업은 법정 공시로 옮겨 가는 순간 빈칸이 드러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2월 기후 공시 기준을 확정하면서 금융기관이 투자·대출 관련 배출량을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해 공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국내 금융사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데이터 항목 사전에 먼저 만들어 둘 수 있다. 일반 기업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같은 숫자가 다르게 적혀 있지 않은지부터 대조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두 문서가 어긋나면 의무 공시 첫해에 그대로 지적받는다.

놓치기 쉬운 함정. 보고서를 없애는 순간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창구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법정 공시는 투자자를 향한 문서라, 지역사회와 노동자, 시민단체가 궁금해하는 내용은 빠지기 쉽다. 일본 매체가 "통합보고서는 그만둬도 통합 사고는 버리지 말라"고 쓴 이유다. 또 유럽 개정안의 일정은 집행위원회 최종 채택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EU 은행 ESG 공시항목 37% 축소...EBA, XBRL 전산규격 확정 · [オルタナ \(일본, 2026-10\)](#) — キリンHDも統合報告書の廃止を検討: サステナ開示は有報に一本化へ · [オルタナ \(일본, 2026-10\)](#) — 統合報告書は止めても「統合思考」は続けたい · [ESG Today \(국제, 2026-10\)](#) — [California Locks in November Deadline for First Corporate Climate Reports](#)

안보가 자본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 — 신규 사업의 90%가 광업이 된 미국 개발금융공사, '네 가지 힘'을 꺼낸 JP모건, 국방비에 밀린 영국의 히트펌프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저소득국의 민간 투자와 개발을 돕기 위해 2018년 의회가 만든 기관이다. 이번 주 임팩트 투자 전문 매체 임팩트알파가 이 기관의 사업 데이터베이스와 의회조사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원의 방향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9월 30일 끝난 2026회계연도의 활성 사업 가운데 90%가 광업과 채굴 산업이었다. 직전 회계연도에는 13%, 그 전해에는 1%였다. 마다가스카르 희토류 광산, 모잠비크 흑연 사업, 콩고민주공화국 광업 합작사가 새 목록에 올랐다.

반면 현지 금융기관과 펀드를 통해 중소기업과 농촌 금융을 지원하던 방식은 거의 사라졌다. 정권 교체 직전 승인된 아프리카 농촌 소액금융 펀드 1,500만 달러, 신흥시장 탈탄소 펀드 3,500만 달러, 중소기업 혼합금융 펀드 3,000만 달러는 활성 사업 목록에 없다. 2025회계연도 신규 약정은

35억 달러로, 그 전해 120억 달러에서 크게 줄었다. 기관장은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분야에서 적국에 직접 맞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는 지난해 12월 이 기관을 6년간 재승인하면서 책임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050억 달러로 올렸다.

민간 금융도 같은 방향으로 언어를 바꿨다. JP모건체이스는 에너지·환경 전략을 개편하며 감축만이 아니라 가격 적정성, 안보, 안정성,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힘'을 함께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배출량은 "불완전한 지표"라고 평가했지만, 업종별 탄소 집약도 목표는 2035년으로 연장해 유지했다. 석유·가스는 2035년까지 47%, 전력은 79%, 자동차 제조는 65% 감축이다. 2030년까지 2조 5,000억 달러를 지속가능 발전에 조달하겠다는 목표는 2025년 말 1조 2,000억 달러까지 왔지만, 녹색 범위에 원자력과 전력망, 다각화된 발전사의 저탄소 발전을 새로 넣은 효과가 1,450억 달러였다.

영국 정부는 28일 예산안을 앞두고 국방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려 에너지안보·넷제로부의 지출을 20억 파운드 이상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정용 히트펌프 보조금이 우선 감축 대상으로 거론된다. 프랑스 지속가능금융 연구 조직 노벤틱은 유럽에서 판매되는 방위산업 펀드 48개를 분석해, 3분의 2가 2025년에 출시됐고 운용사 다섯 곳 중 한 곳(19%)은 국제인도법상 문제 무기 관련 기업을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미국 개발금융공사」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JP모건이 '불완전한 지표'라고 부른 금융배출량은 국내 금융지주의 공시에도 핵심 숫자다. 하나금융그룹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금융배출량 합계를 5,708만 톤으로 산정했고, 이는 자체 사업장 배출량 6만 5,832톤의 860배가 넘는다. 유틸리티·에너지·소재·산업재 같은 에너지 집약 산업 익스포저는 288조 2,000억 원이었고, 2030년까지 포트폴리오 금융배출량을 2020년 대비 32.8%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형 은행이 녹색의 범위를 넓히는 흐름은 국내 금융사에도 같은 유혹을 만든다. 범위를 넓히는 것 자체보다, 넓은 만큼의 실적을 따로 떼어 공개하느냐가 신뢰를 가른다. JP모건이 1,450억 달러를 별도로 밝힌 방식이 기준선이 될 수 있다.



심층 — '안보'가 임팩트 자본의 새 분류 기준이 될 때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 · JP모건체이스 · 영국 에너지안보·넷제로부 · 노벤틱 방위 펀드 분석)

왜 지금 중요한가. 개발금융기관은 민간 자본이 가지 않는 곳에 먼저 들어가 위험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 왔다. 미국 개발금융공사가 그 자리를 비우면서, 아프리카 농촌 금융과

중소기업 대출을 받던 측매 자본의 한 축이 빠졌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글로벌개발 센터의 분석가는 이제 이 기관이 "자본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대형 은행은 안보와 가격을 감축과 같은 무게로 놓았고, 영국은 국방 재원을 위해 탈탄소 예산을 줄이려 한다. 안보가 자본 배분의 상위 기준이 되면, 임팩트는 그 아래에서 정당성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안보 논리와 임팩트를 겹칠 수 있는 사업이다. 전력망, 에너지 저장, 원자력, 공급망 재편은 양쪽 모두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불리해지는 쪽은 안보와 연결 고리가 약한 사회적 사업이다. 농촌 소액금융, 기후 적응, 저소득국 중소기업 금융이 대표적이다. 투자자 쪽에서는 방위 펀드를 ESG 상품으로 판매하면서 배제 기준을 정비하지 않은 운용사가 법적 위험을 진다. 노벡틱 분석은 지속가능성 특성을 홍보하는 펀드 범주에서도 같은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정부가 내놓은 녹색대 전환 전략은 10년간 약 1,000조 원을 동원하고 그중 중소·중견기업에 70% 이상을 배분하겠다고 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내년 3월 16일 시행되는 만큼, 이 재원과 사회적경제를 잇는 통로를 시행령에서 함께 설계할 수 있다. 재원이 공급망과 산업 안보 논리로 짜일수록 사회적경제 조직과 기후 적응 사업은 자리를 잃기 쉽다. 국내 임팩트 투자자와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자기 사업이 지역 공급망 회복력이나 에너지 자립 같은 안보 언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연결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그 공백을 메울 재단·지자체 재원을 따로 설계해야 한다.

농치기 쉬운 함정. 안보와 임팩트를 겹친다는 명분이 모든 채굴 사업을 임팩트로 포장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광산은 지역 공동체와 노동, 물 문제에서 갈등이 큰 산업이다. 미국 개발금융공사는 법에 따라 해마다 사회적 영향과 인권·노동·환경 준수 여부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보고서가 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US Development Finance Corp. moves toward critical minerals and away from... development](#) · ESG Today (국제, 2026-10) — [JPMorgan Recalibrates Sustainable Finance Strategy to Balance Emissions Reduction with Energy Security](#) · IMPACT ON (한국, 2026-10) — 영국, 국방비 늘리려 히트펌프 · CCUS 예산 삭감 검토 · Novethic (프랑스, 2026-10) — [Défense et finance durable : les nouvelles frontières de l'investissement responsable](#) · IMPACT ON (한국, 2026-09) — [하나금융, 기후위험 총당금 2050년 최대 3조원...전환보다 물리적 위험이 컸다](#)

02 세계에서 온 임팩트 흐름

나머지 95%를 움직이는 재단들 — 기금 3억 8,000만 달러를 사명에 맞추는 닷지재단, 93%까지 온 우드콕재단, 그리고 상장 전에 돈을 돌려받은 아프리카 대출 플랫폼 투자자들

미국 재단은 해마다 기금의 5% 안팎을 기부로 내보낸다. 나머지 95%는 대개 일반 금융시장에서 수익을 쫓는다. 뉴저지 뉴어크의 제럴딘 R. 닷지재단은 이번 주 약 3억 8,000만 달러 기금 전체를 '사명과 가치에 맞는' 투자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재단의 사명은 뉴저지의 인종 간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2025년 6월부터 재단을 이끄는 삼라 하ighter 대표는 "5%를 나눠 주는데 95%가 그 노력과 반대로 움직인다면 영향을 만드는 것이냐"는 동료 재단장의 말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기금 대부분은 2020년 설립된 흑인 소유 외부 위탁 운용사가 맡고, 일부는 재단이 직접 뉴저지 안의 주거와 종업원 소유 분야에 투자한다. 6월에는 카운티 공공기관에 약 60만 달러를 빌려줘 공공 임대 성격의 사회주택 개발을 도왔다. 그 말을 했던 우드콕재단은 9,000만 달러 기금의 약 93%를 이미 사명에 맞췄고, 이번 주 4개 펀드에 200만 달러를 새로 넣었다. 중남미 사회적기업에 저리 인내 대출을 주는 펀드와 주민이 동네 상가에 지분 투자를 하게 하는 시카고 부동산 투자사에는 각 25만 달러의 촉매 자본을, 미국 분산형 태양광·저장 인프라 펀드와 지속가능 산림·농지 펀드에는 시장 수익률 자본을 배분했다.

연기금과 국경 밖 거래도 이어졌다.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ABP는 2030년까지 기후·생물다양성에 11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목표 아래, 일부 나무만 골라 베어 숲을 유지하는 방식의 산림 펀드에 1억 5,000만 유로를 맡겼다. 아프리카 금융기관과 함께 2018년 이후 44억 달러의 단기 대출을 공급한 대출 인프라 기업 쿤다에서는 초기 투자자들이 500만 달러어치 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팔아, 상장이나 매각 전에 투자금을 회수했다.

브라질에서는 23년 된 산업 폐수 처리용 미생물 제품 기업 제네티카가 운용자산 80억 유로의 프랑스 임팩트 운용사 아르시메드에 경영권을 넘겼다. 거래는 전액 기존 주주 지분을 사는 방식이었고, 창업자들은 가장 큰 금액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도울 파트너를 골랐다고 말했다. 중남미 임팩트 네트워크 라팀팩토의 연례 행사가 아마존 마나우스에서 열렸고, 브라질 게르다우 가문의 5대손 베아트리스 요한페테르는 전통적 기부에서 임팩트 투자로 옮겨 온 20년을 돌아봤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4개국 8개 매체가 「impact investing·임팩트 투자」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국내 재단과 기업 사회공헌 조직의 자산 운용은 아직 기부와 따로 논다. 이 구조를 바꿀 제도적 계기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다. 8월 20일 국회를 통과해 9월 15일 공포된 이 법은 내년 3월 16일 시행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이 30개에 이른다. 시행령에 사회연대금융의 자금원으로 재단 기금의 사명 연계 투자를 명시할 수 있다면, 기부 5%에 머물던 재단의 역할이 투자 95%로 넓어질 길이 생긴다. 닛지재단이 자산 격차 해소라는 사명에 맞춰 주거와 종업원 소유를 고른 것처럼, 국내 재단도 자기 사명과 맞닿은 투자 분야를 한두 개로 좁혀 시작할 수 있다.



심층 — 재단 기금이 임팩트 자본의 주력이 되는 조건 (닛지재단 · 우드콕재단 · ABP · 쿤다 지분 거래 · 아르시메드)

왜 지금 중요한가. 이번 호 헤드라인에서 본 것처럼 공공 개발금융이 물러나고 대형 은행이 안보로 기울면, 시장 수익률을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돈의 비중이 중요해진다. 그 돈이 가장 많이 고여 있는 곳이 재단 기금이다. 우드콕의 사례는 기금 전체 정렬이 구호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목표임을 숫자로 보여 줬고, 닛지는 그 논리가 동료 재단 사이에서 번지는 경로를 보여 줬다. 지난 호까지 이 지면이 다룬 임팩트 지분의 세컨더리 거래도 이번 주 쿤다에서 실제 거래로 나타났다. 묶여 있던 초기 자본이 돌아와야 다음 투자가 가능하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재단의 사명을 이해하는 위탁 운용사와 지역 밀착형 펀드다. 닛지가 지역 출신 운용사를 고른 이유는 실력과 함께 지역 이해였다. 인내 자본을 받는 중남미 사회적기업, 주민 지분을 모으는 부동산 사업도 혜택을 본다. 불리해지는 쪽은 수익률 극대화만 내세워 온 전통 운용사, 그리고 기금 운용과 기부 부서가 서로 대화하지 않는 재단이다. 재단 안에서 투자 담당과 사업 담당이 다른 목표를 좇으면 '95%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 논의에서 현장은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의 자본금 요건을 3,000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협동조합 출자금과 비영리법인 출연금도 자본금으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반영되면 재단이 중개기관에 출연하거나 출자하는 경로가 넓어진다. 국내 재단은 이사회에서 기금 운용 지침에 '사명 연계 투자' 항목을 넣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처음부터 비율 목표를 크게 잡기보다 우드콕처럼 촉매 자본과 시장 수익률 자본을 나눠 각각의 기대 수익을 적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하다.

놓치기 쉬운 함정. '기금 100% 정렬'은 기준이 느슨하면 공허해진다. 무엇을 '사명에 맞는' 투자로 볼지, 그 판단을 누가 하는지 공개하지 않으면 일반 ESG 펀드를 사 놓고 정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또 세컨더리 거래는 초기 투자자에게 회수 기회를 주지만, 매수자

가 수익을 더 강하게 요구하면 기업의 사명이 흔들릴 수 있다. 제네틱카 창업자가 가격보다 파트너를 골랐다는 말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Geraldine Dodge Foundation goes all in on closing the racial wealth gap](#) · ImpactAlpha (미국, 2026-10) — [Woodcock Foundation deploys catalytic and market-rate capital in its latest round of impact deals](#) · ImpactAlpha (미국, 2026-10) — [Dutch pension fund gives SLM Partners €150 million to invest in sustainable forestry](#) · ImpactAlpha (미국, 2026-10) — [Accion and other early investors pick up secondary stakes in Kuunda's lending platform](#) · Brazil Journal (브라질, 2026-10) — [Fundo de impacto compra a Genetica, biotech de Chapecó](#) · Alliance Magazine (영국, 2026-10) — [Beatriz Johannpeter: From traditional philanthropy to impact investing](#)

보험이 물러난 자리는 누가 메우나 — 유럽 보험사 내부자 24명의 경고, 보험으로 보상된 재해 손실 25%, 그리고 폭염이라는 가장 큰 부채

영국 비영리 싱크탱크 인사이드트랙은 이번 주 유럽 보험업계 고위 전문가 24명을 인터뷰한 보고서를 냈다. 결론은 보험사들의 기후재난 보장 축소가 이미 본격화됐고 앞으로 더 빨라진다는 것이다. 유럽보험·직역연금감독청 집계로 1980~2024년 유럽 자연재해 손실 가운데 보험으로 보상된 몫은 약 25%였다. 나머지 75%는 가계와 기업, 정부가 떠안았다. 보고서에서 가장 무거운 대목은 내부 압력에 대한 증언이다. 일부 회사에서 재해 모델 담당자와 보험계리사에게 미래 손실 전망치를 낮추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에 들 수 없는 고위험 주택이 늘면 주택담보대출 시장으로 충격이 번질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경영진 보상이 단기 실적에 묶여 있어, 위험이 커지기 전에 인수를 중단하고 빠져나가는 선택이 합리적이 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관행 때문에 보험사가 가진 장기 위험 분석 역량이 주택 소유자의 방재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영국 보험협회는 위험 모델에 큰 돈을 쓰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사회 전체의 회복력은 보험사 혼자 만들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매체는 이 보고서에 참여한 영국·유럽 보험·재보험사 간부 스무 명가량이 익명으로 우려를 밝혔다고 전했다. 감독기구도 같은 방향의 숫자를 내놨다. 유럽보험·직역연금감독청은 9월 30일 생명보험·건강보험·기업연금에 대한 기후 영향 보고서를 내고, 극한 고온을 이들 부문의 가장 큰 기후 관련 부채 위험으로 꼽았다. 2000년 이후 유럽에서 폭염으로 약 30만 명이 숨졌고, 이는 기상·기후 재해 사망자의 약 97%에 해당한다.

현재 재무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커질 것이라는 경고다. 손해보험이 물러나는 문제가 생명보험과 연금의 부채 문제로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 알리안츠 임원은 특정 도시나 지역 전체가 보험 인수 불가 지역이 될 수 있다고 했고, 영국 아비바 최고경영자는 새로 짓는 주택조차 홍수 위험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3개국 3개 매체가 「기후 보험」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한국 시사점 — 한국에서는 이 위험이 은행 장부에서 먼저 숫자로 나왔다. 하나금융그룹은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처음으로 기후 위험을 대손충당금으로 환산해, 2025년 4,664억 원인 총당금이 대응이 늦어지는 시나리오에서 2050년 태풍·홍수 같은 물리적 위험만으로 최대 3조 643억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영향이 가장 큰 지역은 부동산 담보가 몰린 서울과 경기도였다. 유럽 보고서가 경고한 '보험 공백이 주택담보대출로 번지는 경로'가 국내에서는 은행 총당금의 형태로 이미 계산되고 있는 셈이다. 보험사가 보장을 줄이면 그 손실은 결국 담보를 잡은 은행과 집을 가진 가게로 넘어간다.



심층 — 보장 공백은 사회 문제다 (인사이드트랙 보고서 · 유럽보험·지역연금감독청 · 노벤틱)

왜 지금 중요한가. 보험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나누는 사회적 장치다. 그 장치가 위험이 가장 큰 곳부터 빠져나가면, 남는 것은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큰 위험을 혼자 지는 구조다.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저지대와 노후 주택에 살 가능성이 높고, 보험이 없으면 재해 뒤 복구 자금도 구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금융 안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형평의 문제다. 임팩트 투자와 사회적금융이 이 공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다.

승자와 패자. 단기적으로 유리한 쪽은 고위험 지역에서 일찍 빠진 보험사다. 손해율이 낮아지고 실적이 좋아진다. 길게 보면 불리해지는 쪽은 그 지역의 가게, 담보를 잡은 은행, 재해 복구 비용을 대야 하는 정부다. 반대로 새 기회를 얻는 쪽도 있다. 지역 단위로 위험을 묶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보장하는 공동 보험 제도, 방재 투자를 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기후 보험을 설계하는 임팩트 기업이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하나금융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7개 다배출 업종 투자 6조 8,000억 원을 취약자산으로 분류했지만, 서울·경기 지역의 담보 노출 규모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국내 금융사가 다음 공시에서 지역별 노출을 공개하면, 지자체와 보험사가 어느 동네부터 방재 투자를 할지 정할 근거가 생긴다. 임팩트 투자자와 지자체는 저소득 가구의 침수 방지 시설 설치를 보험료 할인과 묶는 시범 사업을 설계해 볼 수 있다. 보험과 대출, 공공 방재 예산을 한 사업 안에 묶는 것이 핵심이다.

놓치기 쉬운 함정. 내부자 증언은 익명이라 개별 회사의 관행을 확인할 수 없다. 특정 보험사의 잘못으로 단정하지 말고 업계 구조의 문제로 읽어야 한다. 또 보험료 인상이나 인

수 거부를 무조건 나쁜 일로 볼 수도 없다. 위험이 정확히 가격에 반영돼야 위험한 곳에 집을 짓지 않게 된다. 문제는 가격의 경고가 취약 계층에게만 집중될 때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유럽 보험사들, 기후재난 보장 축소...내부자 24명 인터뷰 담은 보고서 · Novethic (프랑스, 2026-10) — Climat : des assureurs anonymes alertent sur le risque de crise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EU】EIOPA、生損保に包括的な気候リスク評価要請。財務影響増加。欧州死者30万人に到達

공급망 끝까지 책임이 내려간다 — 애플이 끊은 시설 257곳, 생활임금을 주는 의류 브랜드 110곳 중 4곳, 그리고 헌 옷이 도착하는 나라를 위한 연합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관리는 이제 '요청'이 아니라 '거래 조건'이다. 국내 지속가능경영 매체가 정리한 사례를 보면, 애플은 2009년 이후 자사 기준을 어긴 제조 공급업체 시설 25곳과 제련·정제업체 232곳을 공급망에서 뺐다. 2024년 적발된 핵심 위반 10건 중 9건은 근로시간 기록 조작이었고, 핵심 위반이 나오면 최고경영자에게 통보하고 해결될 때까지 신규 수주를 막는다. H&M은 2022~2024년 기준 미달로 생산 공장과의 거래 24건을 끝냈다.

로로피아나는 승인받지 않은 하청에 생산을 맡긴 직접 공급업체와 24시간 안에 거래를 끊었고, 2024년 이후 약 2,400건의 감사로 100곳 넘는 업체와 결별했다. 프라다는 2020년 이후 850회 넘는 현장 점검으로 222곳을 퇴출했다. 그런데 거래를 끊는 것과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것은 다른 일이다. 국제 노동권 단체 클린클로스캠페인이 9월 낸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의류 브랜드 110곳 가운데 공급망 어느 단계에서든 생활임금이 지급된다고 밝힌 곳은 4곳뿐이었다. 시간 계획이 있는 생활임금 실행 계획을 공개한 곳은 3%였다. 방글라데시 의류 노동자의 임금은 그 나라 생활임금보다 73%, 파키스탄은 74% 낮았다.

공급망의 끝은 생산지만이 아니다. 아디다스, 덴마크 베스트셀러, H&M그룹, 스페인 인디텍스와 비영리단체 오재단은 9월 29일 중고 의류가 수출되는 나라에서 생기는 환경·사회 문제를 다루는 '의류회수연합'을 세웠다. 헌 옷이 물리는 가나 같은 나라의 폐기물 문제를 생산자 책임의 범위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다.

이탈리아에서는 연구 기관들이 국내 섬유 폐기물이 연 61만 5,000톤이고 분리 수거되는 것은 15만 4,000톤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브랜드 가운데 공급망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은 19%가 안 됐다. 유럽연합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2029년부터 대형 패션 기업에 공급망의 임금 구조에 대한 책임을 묻고, 생활임금을 포함한 적정 생활 수준에 기여하도록 요구한다. 클린클로스캠페인은 조사 대상 가운데 30곳이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2개 매체가 「living wage·생활임금」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1건이다.

한국 시사점 — 공급망 문제는 국내 기업의 생산 현장에서 이미 비용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1월 미국 세관이 강제노동 연루 의심으로 수입 태양광 부품을 억류하면서 조지아주 공장 직원 약 1,000명의 근무시간과 임금을 줄여야 했다. 원재료 한 단계의 문제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 노동자의 월급으로 번진 것이다. 국내 원청이 협력사에 실사를 요구하는 만큼, 원청 스스로도 자기 원재료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생활임금 기준을 공급망에 적용하는 일은 국내 브랜드에서 아직 드물다.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의류·신발 기업이 그 질문을 먼저 받게 된다.



심층 — '거래 중단'에서 '임금 구조'로 (애플·H&M·로로피아나·프라다 · 클린클로스 캠페인 · 의류회수연합)

왜 지금 중요한가. 지금까지 공급망 관리의 주된 도구는 감사와 퇴출이었다. 문제를 찾고, 고치지 않으면 끊는다. 이 방식은 브랜드의 위험을 줄이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그대로 두거나 오히려 나쁘게 만들 수 있다. 거래가 끊긴 공장의 노동자는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다. 유럽 실사 지침이 생활임금을 명시하면서 질문이 바뀌었다. 위반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공급망 안에서 임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바꾸는 능력이 평가 대상이 된다. 브랜드의 구매 가격과 납기 조건이 공장의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공급업체와 장기 관계를 맺고 구매 가격에 인건비를 반영해 온 브랜드다.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데볼드는 공급 공장의 50%가 생활임금을 준다고 밝혀 조사 대상 중 가장 높았다. 불리해지는 쪽은 최저가 입찰로 공장을 자주 바꾸는 브랜드, 그리고 공장 목록조차 공개하지 않는 곳이다. 공장 정보를 일부라도 공개한 브랜드는 41%로 늘었지만 임금 수준을 공개한 곳은 3%뿐이었다. 정보 공개의 다음 단계가 임금 공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유럽 산림전용방지규정은 12월 30일부터 주요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내년에는 배터리 원재료 실사와 강제노동 제품 금지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월 18일 중견기업 임원 대상으로 이 공급망 규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연다. 국내 중견 제조기업은 지금 1차 협력사 목록과 원재료 원산지 표를 정리해 두고,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의류·신발 기업은 주요 공장의 실제 임금 자료를 확보하는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생활임금 수치는 단체가 직접 조사한 자료라 브랜드 쪽 집계와 다를 수 있다. 또 퇴출 건수가 많다는 것을 관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된다. 많이 끊었

다는 것은 처음부터 위험한 곳과 거래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의류회사연합 역시 출범 단계라 참여 브랜드가 실제로 어떤 비용을 분담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애플은 신규 수주 제한, 현대차는 2086곳 ESG 진단…2027년, 공급망 리스크 대응은? · ESG Dive (미국, 2026-10) — Few major apparel brands pay garment workers a living wage: report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国際】アディダスやH&M等、中古アパレル輸出先の環境・社会製造者責任で連合設立 · ESG News (이탈리아, 2026-10) — Rifiuti tessili: 615mila tonnellate l'anno in Italia

일하는 사람은 늘고 조직은 그대로인 이탈리아의 제3섹터 — 비영리 37만 곳·고용 93만 8,000명, 8억 유로가 아닌 80억 유로를 요구한 포럼, 그리고 '두 숫자 시험'

이탈리아 통계청 연구진은 9일 시민경제 연례 행사에서 비영리 부문의 최신 숫자를 공개했다. 2024년 활동 중인 비영리 기관은 37만 2,384곳으로 전년보다 0.5% 늘었고, 고용은 93만 8,152명으로 2.8% 늘었다. 2021년 이후 조직 수보다 고용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조직의 73.5%는 유급 직원이 한 명도 없다. 직원의 55.3%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절반 가까이가 사회복지·시민보호 분야에 있다. 고용 증가는 남부와 섬 지역에서 가장 컸다.

법적 형태로 보면 재단이 8.6% 늘었고, 사회적협동조합은 1.7% 줄었다. 비영리 기관 열 곳 중 아홉 곳이 다른 기관과 관계망을 맺고 있다는 조사도 함께 나왔다. 이탈리아 제3섹터 연합체인 제3섹터포럼은 정부 예산안 논의에 앞서 장기요양, 영유아, 기후, 인구, 문화와 스포츠를 아우르는 약 80억 유로 규모의 정책 제안을 처음으로 미리 내놔다. 재원 일부는 군비 증강 경쟁을 멈추고 탈세를 막아 마련하자고 했고, 소득세의 0.5%를 비영리에 지정하는 제도의 한도 상향과 비영리 기관의 지방세 인하도 요구했다.

같은 주 이탈리아 연구지는 은행 출연 재단이 산간 지역에서 '돈을 주는 기관'에서 '지역을 움직이는 기관'으로 바뀌는 사례를 소개했다. 인구 약 5만 명의 산간 지역에서 활동하는 발테스재단은 보조금을 나눠 주는 대신 주민이 직접 지역의 자원과 기억을 그리는 '공동체 지도' 작업을 지원했다. 돈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서비스 축소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영국 사회적기업 매체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두 숫자로 시험하자는 글이 실렸다. 서비스 한 단위, 예컨대 고객 한 명이나 식사 한 끼를 만드는 데 드는 실제 전체 비용과, 그 단위당 반복해서 믿고 받을 수 있는 수입을 계산해 수입이 비용 이상이어야 지속가능하다는 것이다. 일회성 보조금과 모금 행사 수입, 용도가 정해진 혁신 자금은 수입에서 빼야 한다. 필자는 자금원을 다양화하는 것은 위험 분산일 뿐 지속가능성이 아니라고 썼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2개국 6개 매체가 「Terzo Settore·제3섹터」 이야기를 다뤘고,

직전 4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매체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한국 시사점 — 한국은 지금 사회연대경제의 제도 골격을 짜는 중이다. 경기소셜벤처협의회는 15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하고, 경기도사회적경제원·법무법인과 함께 소셜벤처 정책제언 태스크포스를 꾸렸다. 첫 과제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시행령에 도내 소셜벤처의 현장 의견을 넣는 것이다. 이탈리아 통계는 이 논의에 질문 하나를 던진다. 조직 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가, 그리고 조직의 4분의 3이 유급 직원 없이 움직이는 구조를 제도가 어떻게 지원하는가. 국내 시행령 논의도 지원 대상 조직의 범위만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용 통계를 함께 만드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



심층 — 제도가 성숙할수록 묻는 것은 '얼마나 많은가'가 아니라 '얼마나 버티는가'다 (이탈리아 통계청 · 제3섹터포럼 · 발테스재단 · '두 숫자 시험')

왜 지금 중요한가. 이탈리아는 2017년 제3섹터 법 개혁 이후 단일 등록부를 만들고 세제를 정비해 왔다. 한국이 지금 들어서는 길을 몇 년 먼저 걸은 셈이다. 그 결과로 나온 숫자는 조직은 거의 늘지 않는데 고용은 꾸준히 늘고, 법적 형태가 재편되는 모습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줄고 재단과 사회증진협회가 늘 것은 제도의 유인 구조가 조직 형태를 바꾼다는 증거다. 제도를 설계할 때 어떤 형태를 우대하느냐가 몇 년 뒤 생태계의 모양을 정한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반복 수입 구조를 갖춘 조직이다. 위탁 계약과 서비스 요금처럼 해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는 사회적기업은 예산 삭감기에도 버틴다. 지역 관계망을 가진 조직도 유리하다. 불리해지는 쪽은 단년도 공모 사업에 의존하는 조직이다. '두 숫자 시험'으로 보면 이런 조직은 서비스를 늘릴수록 적자가 커진다. 은행 출연 재단 가운데 보조금 배분만 해 온 곳도 지역 소멸 앞에서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한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28개 조문의 기본법이라 지원 대상과 공공구매, 사회연대금융의 구체 기준을 시행령이 정한다. 시행령 실무안이 나오기 전인 지금, 현장 조직은 '두 숫자 시험'을 스스로 해 보고 그 결과를 정책 제언의 근거로 쓸 수 있다. 서비스 단위당 실제 비용과 반복 수입의 차이를 숫자로 보여 주면, 단년도 보조금 대신 다년도 위탁 계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훨씬 설득력을 얻는다.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같은 지역 협의체가 회원사 자료를 모으면 더 강한 근거가 된다.

놓치기 쉬운 함정. 이탈리아 통계에는 등록이 늦게 이뤄지는 '드러남 효과'가 섞여 있어, 증가분 일부는 새 조직이 아니라 기존 조직의 등록일 수 있다. 숫자를 그대로 한국과 비교하면 안 된다. '두 숫자 시험'도 기부와 자원봉사가 본질인 조직에는 맞지 않는다. 모든

사회적 조직이 시장 수입으로 버텨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면 공공이 맡아야 할 몫까지 현장에 떠넘기게 된다.

출처: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10) — Il Terzo Settore cresce nel lavoro e nelle reti, ma anche in quel che di solito non si conta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10) — Clima, demografia, economia sociale: le proposte del Forum Terzo Settore per la Legge di Bilancio · Percorsi di Secondo Welfare (이탈리아, 2026-10) — Finanziare non basta: il nuovo ruolo delle fondazioni bancarie nello sviluppo locale · Pioneers Post (영국, 2026-10) — Would your social enterprise fail this two-number sustainability test? · 더나은미래 (한국, 2026-10) — 경기소셜벤처협의회 공식 출범...현장 목소리 담은 정책 제언 나선다

03 현장 들여다보기 — 한국의 임팩트 현장

광명 포럼이 남긴 숫자 — 사회연대경제기업 213곳에서 300곳으로, 수익계약 60%, 그리고 "협동조합 금융 1,000조 원이 지역에 돌아오지 않는다"

지난 호에 예고한 광명시의 '2026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이 13일 열렸다. 미국·스코틀랜드·일본의 사례와 광명시·안성시·대전 중구·영암군 4개 지방정부의 경험이 한자리에 모였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수도권은 성장하는 도시인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는 질문에 "부가 어디서 오고 누가 누리는지 봐야 한다"고 답했다. 광명시가 밝힌 실적과 목표는 구체적이다. 2018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사업을 해 와 지금까지 약 213개 사회연대경제기업을 키웠고, 2028년까지 100개를 더 육성해 300개 이상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창업자금은 201개 기업에 약 50억 원을 지원했고, 이 기업들이 매출 387억 원과 고용 172명을 냈다고 밝혔다. 지역 우선 구매를 위해 현재 60% 수준인 수익계약 비율을 높이고, 온라인 판매 공간인 광명상생플랫폼에는 약 200개 기업이 입점해 있다. 시장은 광명의 1인당 지역화폐 결제액이 최근 2년간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았고, 매출 10억 원 이하 가게의 사용 비중이 83%라고 설명했다. 중앙대병원, 광명상공회의소, 기아 같은 지역 앵커기관과 구매·지역화폐 연계 방안도 찾고 있다.

다른 지방정부의 실험도 서로 달랐다. 안성시는 도서관·복지관·체육시설의 야간 운영을 늘리고 야간 지역화폐 혜택을 높이는 '안성밤마실'을 운영하고, 회의 수당 일부를 지역화폐로 바꿨다. 연간 예산 약 8,000억 원 가운데 정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적다는 대전 중구는 주민자치회 법인이 돌봄과 공영주차장 운영 수익을 동네 문제 해결에 쓰는 구조를 소개하고, 지방정부 금고를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영암군은 2024년 지역순환경제 조례를 만들고, 지역 상가 약 80%가 가맹한 지역화폐와 금융소의 계층에 최대 500만 원을 무이자·무담보로 빌려주는 '천사펀드'를 운영해 52명을 지원했다. 좌장을 맡은 한양대 김종걸 교수는 "협동조합 계열 금융만 1,000조 원인데 지역에 환류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돈을 담을 그릇이 지역 안에서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스코틀랜드 발표자는 관련 법이 막 생겨 효과를 평가하기 이르다며, 법보다 현장 실행과 역량 축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지역공동체 자산화」 이야기를 다룬 매체는 아직 한두 곳뿐이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한국 시사점 — 광명 포럼이 보여 준 가장 큰 과제는 수단은 많은데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화폐, 공공조달,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앵커기관 구매가 각자 움직이면 효과가 작다고 미국 발표자는 '정원에 따로 심은 꽃'에 비유했다. 광명이 창업 지원 201개 기업의 매출 387억 원과 고용 172명을 집계한 것은 좋은 출발이다. 다음 단계는 같은 기업들이 지역화폐 가맹, 공공조달 수주, 앵커기관 납품을 몇 건이나 겹쳐서 받았는지 한 표에 모으는 일이다. 그래야 어떤 수단의 조합이 기업을 키웠는지 알 수 있다.



심층 — 지역의 돈을 지역에 붙잡는 '그릇'은 무엇인가 (광명시 · 안성시 · 대전 중구 · 영암군 · 지역공동체 자산화 국제포럼)

왜 지금 중요한가. 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영국 프레스턴에서 출발해 앵커기관의 구매력을 지역 기업에 연결하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광명은 2024년 2월 프레스턴을 방문한 뒤 1년여 학습을 거쳐 2025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에서 이 전략이 하나의 도시 사업에서 여러 지방정부의 공동 의제로 넘어가는 장면이었다. 박 시장이 "싸우면서 연대해야지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재정·제도가 지역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에 공동 대응하자고 한 것은 그 의제의 방향을 보여 준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앵커기관과 거래할 역량을 갖춘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이다. 병원과 대기업 공장의 구매 목록에 들어가면 매출이 안정된다. 지역화폐 가맹률이 높은 소상공인도 혜택을 본다. 불리해지는 쪽은 지역 안에 공급 기업이 없는 품목이다. 구매를 지역으로 돌리려 해도 살 곳이 없으면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광명시장이 부족한 부분은 창업과 사업 개발로 채워야 한다고 말한 이유다. 중앙정부 지침에 묶인 소규모 지방정부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김종걸 교수의 지적처럼 협동조합 계열 금융 1,000조 원과 지방정부 금고가 지역에 돈을 돌려줄 그릇이 필요하다. 대전 중구가 제안한 지방 금고와 지역 금융기관의 연계, 영암군 천사펀드처럼 소액 무담보 대출을 지역 기금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그 그릇의 후보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령의 사회연대금융 조항에 시·군·구 단위 지역 기금 설치 근거를 넣는 것이 다음 과제다. 지금은 시·군·구의 기본계획 수립과 지역위원회 설치가 임의 규정이라는 현장 지적도 있다.

농치기 쉬운 함정. 지역 우선 구매를 늘리면 가격과 품질 경쟁이 약해져 공공 예산이 낭비될 위험이 있다.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수록 선정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특별히 시비를 피한다. 또 창업 지원 기업의 매출과 고용은 시가 밝힌 숫자로, 지원이 없어도 생겼을 성과가 얼마인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한다.

출처: 라이프인 (한국, 2026-10) — "지역의 부는 지역에 남아야"...광명서 찾은 지역순환경제 해법 · 라이프인 (한국, 2026-10) — 박승원 광명시장 "지역에서 만든 부, 지역의 자산으로"...성공하려면 '연대와 협력' 필요

설치 대수가 아니라 작동 여부를 묻는다 — 보조금 1조 6,695억 원 중 멈춘 충전기 6,670기, 3배 늘어난 탄소중립포인트의 '참여처 1곳'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만들어 온 환경 인프라가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최근 6년간 민간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에 1조 6,695억 원의 보조금을 썼다. 그런데 사업자 폐업이나 사업 중단으로 지금 운영되지 않는 충전기가 6,670기였다. 이 충전기를 가진 사업자 4곳에 간 보조금만 약 298억 원이고, 그중 2곳은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채 기업회생이나 외부 자금 조달을 추진 중이다. 의원실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전수 분석했더니 '상태 미확인'이나 '통신 이상'이 3일 넘게 이어진 충전기도 1만 7,800여 기였다. 충전시설 관련 정부 예산은 2021년 913억 원에서 올해 5,458억 원으로 늘었다.

시민 참여형 제도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액은 2021년 104억 5,400만 원에서 2025년 349억 1,900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일상의 탄소 감축 실천에 포인트를 주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도 2022년 21억 7,500만 원에서 지난해 150억 1,600만 원으로 커졌다. 그러나 일회용품 반환,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재생원료 사용 제품 구매, 장바구니 이용, 개인 용기 식품 포장 같은 항목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참여 기업·기관이 각각 1곳뿐이었다. 새로 도입된 실천 항목 다수도 참여 기업이 5곳을 넘지 못했다. 예산은 늘었는데 시민이 실제로 그 제도를 쓸 수 있는 문은 좁았던 셈이다.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수질자동측정망 운영 실태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근거 — 최근 4주 동안 한국의 2개 매체가 「충전 보조금·탄소중립포인트」 이야기를 다뤘고, 아직 건수가 적어 늘고 있는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국 매체에서는 최근 4주 2건이다.

한국 시사점 — 이번 국정감사의 지적은 임팩트 측정의 기본 질문과 같다. 산출(설치 대수, 예산 집행액)을 성과(실제 이용, 감축량)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조금 약 298억 원이 들어간 충전기 6,670기에 대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은 정상 운영 여부를 관리하고 부실 사업자의 충전기를 정상화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하는 체계를 요구했다. 탄소중립포인트 역시 지급액 349억 원이라는 숫자보다 시민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매장과 기관이 얼마나 되는지가 더 중요한 지표다. 사회적경제 조직과 제로웨이스트 매장이 참여처로 들어가면 제도가 넓어지는 동시에 이들 조직의 판로도 생긴다.



심층 — 공공 재원의 성과를 '작동 시간'으로 재야 하는 이유 (국정감사 충전기 보조금·탄소중립포인트)

왜 지금 중요한가. 보조금 사업은 대개 설치나 지급 시점까지만 기록한다. 그 뒤 몇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아무도 세지 않는다. 충전기 사례는 이 공백이 얼마나 큰지 보여 준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가 파산하면 시설은 남지만 서비스는 사라진다. 이번 호 헤드라인에서 본 유럽의 흐름, 곧 보고서는 줄이되 대조 가능한 숫자를 지키는 방향은 공공 재원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설치 대수가 아니라 운영 시간과 실제 이용량을 기록해야 예산의 효과를 말할 수 있다.

승자와 패자. 유리해지는 쪽은 운영 실적을 데이터로 보여 줄 수 있는 사업자다. 충전기 가동률과 고장 대응 시간을 공개하는 사업자는 다음 보조금 심사에서 신뢰를 얻는다. 불리해지는 쪽은 설치 보조금을 받아 빠르게 늘리는 데만 집중한 사업자다. 시민 쪽에서는 참여처가 몰린 대도시 주민이 혜택을 보고, 참여 매장이 없는 지역 주민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제도를 쓸 수 없다.

한국 적용 — 타이밍·방법. 충전시설 예산이 2021년 913억 원에서 올해 5,458억 원으로 늘어난 만큼, 국회의 내년 예산 심의 전에 보조금 지급 조건에 '일정 기간 운영 의무와 가동률 보고'를 넣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만 7,800여 기의 통신 이상 충전기는 지금 바로 점검 대상이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참여처가 1곳뿐인 항목부터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과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참여처로 모집하는 공모를 열어, 지급액이 아니라 참여처 수를 성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놓치기 쉬운 함정. 운영되지 않는 충전기를 모두 보조금 낭비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용이 적은 지역에 공공성을 이유로 설치한 시설도 있다. 무조건 회수하면 그 지역의 충전 접근성이 더 나빠질 수 있다. 또 국정감사 자료는 의원실 분석이라, 정부 부처의 해명과 함께 읽어야 한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국감 ESG 브리핑] 충전기 1.7조 투입했는데 6670기 미운영...
[탄소중립포인트도 참여처 부족](#)

04 짧게 짚는 것들 — 다음 호로 이어질 흐름

자연 공시를 약속한 기업과 금융기관이 836곳이 됐다.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NFD)는 57개국 836개 조직이 권고안에 맞춘 공시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1년이 안 되는 사이 14% 늘었고, 금융기관 운용자산은 26조 달러, 상장사 시가총액은 10조 5,000억 달러를 넘는다. 지난 호 이 지면이 전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의 자연 공시 작업에 이어, 국제표준화기구도 9월 협의체의 평가 방법을 국제 표준으로 만드는 안을 승인했다. 같은 주 과학기반 자연 목표 네트워크는 기업의 자연 목표 설정 지침 2.0판을 내 육지와 담수로 범위를 넓히면서 기업 부담은 줄였다.

출처: ESG Today (국제, 2026-10) — Over 800 Companies Commit to TNFD-Aligned Nature Reporting Ahead of New ISSB, ISO Standards · Sustainable Japan (일본, 2026-10) — 【国際】SBTN、自然関連目標設定ガイダンス第2.0版公表

스페인 BBVA는 기후 펀드 12곳에 5억 6,000만 유로를 넣었다. 스페인 사회책임 매체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BBVA는 최근 2년 동안 탈탄소 펀드 투자를 네 배로 늘렸고, 올해 초 기후 투자 펀드 알테라와 손잡고 12억 달러 규모 공동투자 기구에 2억 5,000만 달러를 넣기로 했다. 은행이 직접 대출하는 대신 전문 운용사의 펀드에 출자해 프로젝트 정보를 먼저 얻는 방식이다. 같은 기사는 올여름 스페인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2.4도 높아 1869년 이후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는 기상청 자료를 함께 전했다. 은행 쪽 설명이 중심인 기사라 수치는 은행 발표로 읽어야 한다.

출처: Compromiso Empresarial (스페인, 2026-10) — Fondos climáticos, el motor financiero para acelerar la transición energética

인도에서 금융 포용의 다음 단계는 '쓰는 능력'이다. HSBC 인도법인은 2026~2030년 4년 동안 200크로르 루피(20억 루피)를 들여 금융 이해력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여성, 청년, 이주 노동자, 장애인, 저소득 가구, 금융을 처음 쓰는 사람이 대상이다. 인도에는 정부 주도 기본 계좌가 약 6억

개 열렸고 그중 약 3억 3,000만 개가 여성 명의다. 인도 중앙은행의 금융포용지수는 2025년 3월 67에서 2026년 3월 70으로 올랐다. 계좌를 여는 단계에서 사기를 피하고 디지털 금융을 안전하게 쓰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사업의 문제의식이다.

출처: India CSR (인도, 2026-10) — [HSBC India commits Rs. 200 Crore to Advance Financial Literacy](#)

남은 음식을 팔던 투굿투고가 남은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덴마크에서 2015년 시작한 잉여 식품 거래 플랫폼 투굿투고는 21개국 20만 곳 넘는 식당·슈퍼마켓과 가입자 1억 5,000만 명을 모았다. 이번에는 철 지난 장식품, 포장기 바뀐 화장품, 반려견 간식 같은 비식품 재고를 '서프라이즈 백'으로 팔기 시작했고, 비식품 유통업체 8,500곳과 입점 계약을 맺었다. 소비자는 정가의 약 25~50%를 내고, 매장은 버릴 뻔한 상품에서 매출 일부를 되찾는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로 출발한 사업 모델이 재고 폐기 전반으로 넓어지는 장면이다.

출처: IMPACT ON (한국, 2026-10) — [남은 음식 팔아 매출 4000억원...투굿투고, 화장품·반려동물 용품으로 사업 확장](#)

임팩트 펀드 운용의 '뒷단'이 합쳐지고 있다. 샌디에이고의 미션드리븐파이낸스는 뉴욕의 노운과 손잡고 임팩트 펀드 운용사를 위한 펀드 관리·구조 설계·운영 인프라를 함께 제공한다. 미션드리븐파이낸스의 운용자산은 1억 5,900만 달러, 관리 자산은 약 2억 달러다. 작은 임팩트 운용사들이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받으려면 회계·법무·보고 체계가 필요한데, 각자 갖추기엔 비용이 크다. 운용사와 자문사의 통합이 이어지는 가운데, 운영 인프라를 공유하는 방식이 또 하나의 길로 나타났다.

출처: ImpactAlpha (미국, 2026-10) — [Mission Driven Finance and Known Holdings team up to provide infrastructure for impact fund managers](#)

05 이번 호 전망

이번 호 전망 없음 — 기한과 판정 기준을 함께 세울 수 있는 후보 두 건이 모두 시니어 기술 보도량에 관한 것이라 이 지면의 소재(임팩트의 주체·자본·제도) 밖이었다

06 지난 전망 점검

이 지면이 기한과 판정 기준을 붙여 내놓은 지난 전망은 아직 없다.

지난 4개 호에서 이 지면은 「몇 개월 뒤 한국에 닿는다」 같은 시기 주장을 23번 했지만, 판정 기준과 기한을 붙이지 않아 맞았는지 가릴 수 없다. 그래서 그 말들은 채점에 넣지 않았고, 이번 호부터는 기한과 기준을 붙인 전망만 낸다.

07 편집장의 글

① 점수를 믿지 않는 시대의 신뢰

이번 주 투자자들은 ESG 점수를 덜 믿는다고 답하면서도 점수를 계속 쓰겠다고 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성숙의 표시다. 점수를 정답으로 받아들이던 시기가 지나고, 점수를 질문의 출발점으로 쓰는 시기가 왔다. 에코바디스가 기준연도 없는 목표를 지운 것도, 유럽 감독기구가 '임팩트'라는 말에 의도성과 추가성을 물은 것도 같은 방향이다.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가 어떤 경로로 만들어졌는지가 신뢰를 정한다.

이 변화는 임팩트 업계에 불편하지만 반가운 일이다. 측정을 성실하게 해 온 조직이 그렇지 않은 조직과 구별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로를 보여 주는 일에는 비용이 든다. 큰 기업은 그 비용을 감당하지만 작은 협력사와 사회적기업에는 부담이다. 그래서 공시 항목을 줄이고 소규모 은행의 자료를 감독 데이터로 대신 채워 주는 유럽의 방식이 의미 있다. 신뢰의 문턱을 높이는 일과 그 문턱을 넘을 사다리를 놓는 일은 함께 가야 한다.

② 안보의 언어와 돌봄의 언어

미국 개발금융공사의 신규 사업 90%가 광업으로 채워지고, 영국이 국방비를 위해 히트펌프 보조금을 깎으려 하고, 대형 은행이 안보를 감축과 같은 무게로 놓았다. 자본이 안보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사업들, 곧 농촌 소액금융과 기후 적응, 돌봄과 지역 일자리는 설 자리가 좁아진다. 이탈리아 제3섹터포럼이 예산 제안의 재원으로 군비 증강을 멈추자고 한 것은 이 긴장을 정면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보험이 고위험 지역에서 물러나는 문제도 같은 맥락에 있다. 안보가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면, 보험과 돌봄은 사람을 지키는 일이다. 둘 중 하나만 고를 수는 없다. 임팩트 업계가 해야 할 일은 돌봄의 언어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왜 사회의 회복력, 곧 넓은 의미의 안보인지 숫자로 설명하는 것이다. 재해 뒤 복구 비용, 고립된 노인의 의료비, 무너진 지역 경제의 세수 손실을 계산해 보이면 돌봄도 안보의 장부에 적힐 수 있다.

③ 재단과 지방정부, 남은 두 개의 장부

이번 주 가장 희망적인 장면은 거대 기관이 아니라 중간 크기의 주체들에게서 나왔다. 미국의 지역 재단들은 기금 전체를 사명에 맞추겠다고 나섰고, 한국의 광명시와 영암군, 대전 중구는 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 붙잡아 둘 방법을 각자 실험했다. 둘은 다했다. 재단은 기부 5% 바깥의 95%를, 지방정부는 복지 예산 바깥의 구매와 금고를 임팩트의 도구로 쓰려 한다. 이미 가진 돈의 쓰임을 바꾸는 일이라 새 재원이 필요 없다는 점이 강점이다. 그러나 둘 다 같은 벽에 부딪힌다. 무엇을 사명에 맞는 투자로 볼지, 어떤 기업을 지역 기업으로 볼지 기준을 세우고 공개하는 일이다. 기준이 없으면 정렬은 구호가 되고, 지역 우선 구매는 특혜가 된다. 이번 호 첫머리의 질문이 여기서 다시 돌아온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검증 경로에서 나온다.

한국의 임팩트 업계가 이번 주 스스로 점검할 것은 세 가지다. 우리가 쓰는 '임팩트'라는 말마다 근거 자료가 붙어 있는가. 우리 사업은 안보와 회복력의 언어로 설명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공백을 메울 재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재단 기금과 지방정부 금고처럼 이미 있는 큰 돈의 쓰임을 바꾸자고 제안할 준비가 돼 있는가.

본 자료는 문화미래기획자 정현영이 연구용으로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2026년 10월 4주 · 전문가판